광복 70돌,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속 토론회 1.

<남북관계 보도 이대로 좋은가!>

- KBS와 조선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

▣. 일 시: 2015년 8월 10일(월), 오후 3시

▣.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주 최: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 주 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 후 원: 한겨레,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남북관계 보도 이대로 좋은가!>
- KBS와 조선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

▣. 일 시: 2015년 8월 10일(월), 오후 3시
▣.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주 최: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 주 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 후 원: 한겨레신문사,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 진 행: 이준희(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집행위원)
□. 개회사: 김환균(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공동대표, 언론노조 위원장)
□. 격려사: 이창복(광복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상임대표)
□. 인사말: 정일용(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 사 회: 고승우(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민언련 이사장)

▼. 발 제1: 김춘효(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언론학박사)

▼. 발 제2: 이용마(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MBC해직기자)

▼. 토 론: 김정환(KBS 기자)
김치관(통일뉴스 편집국장)
심영섭(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장용훈(연합뉴스 북한전문 기자)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폐 회
◇. 기념촬영

<개회사>

DMZ에서 펼쳐질 남북 공동 행사를 꿈꾸며

김환균(6·15남측위 언론본부 공동대표, 언론노조 위원장)

광복 70주년입니다. 남북 노동자들이, 한반도 전체 민중들이 손잡고 맞이하는 광복 70주년을 떠올려 봅니다. 평화의 공간으로 바뀐 DMZ에서 남북 노동자들이 어울려 춤추고 노래합니다. 아이들은 굴렁쇠 놀이와 사방치기를 하고. 우리 조합원들이 기쁜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한 후 함께 어울려 이야기 꽃을 피우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하지만 맞이할 8월 15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과 남, 남과 북 소통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동안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활동이 저조한 것이 반증하기도 합니다. 남과 북 언론인들이 금강산에서 모여 평화 통일과 국제 정세, 삶을 이야기한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그런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남북 관계가 어려울 때 이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우리 6.15남측위 언론본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광복 70돌맞이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남북교류와 민족화해, 평화통일을 위해 지렛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 광복 70년을 정치적 이벤트 또는 관례적이며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언론활동을 해 왔는지 성찰과 반성 그리고 계획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좀 더 일찍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2000년 이후 남북 관계를 전해온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활발한 토론과 이후 실천을 통해 언론이 통일의 디딤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난 2006년 남북언론인 공동성명을 읽으며, 행복한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남과 북의 언론인들은 6.15시대 대변자로서의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합의하고 온 겨레가 지지하는 민족 공동의 통일대강이다. 남과 북의 언론인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둘째, 남과 북의 언론인들은 민족문제에 대한 간섭과 전쟁위협을 단호히 반대 배격한다.

셋째, 남과 북의 언론인들은 6.15공동선언 실천을 후퇴시키고 동족 사이에 대결과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민족분열적 보도를 배격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공정하게 보도한다.

넷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북측 언론분과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언론활동에서 연대를 실현하며 남북언론인토론회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남북 언론인들의 공동협력사업을 계속해 나간다.

언론은 정의이고 양심이며 진실이어야 한다. 남과 북의 언론인들은 겨레의 목소리를 온 세계에 알리는 전파자가 되고 민족자주와 통일을 앞당기는 시대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6.15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뜻과 마음을 합쳐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언론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자는 것을 해내외 모든 언론인들에게 호소한다.

<격려사>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필요

이창복(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상임대표)

광복 70돌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닥쳐온 분단의 고통을 넘어 평화통일을 위해 겨레가 분투한 지도 벌써 70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팎의 상황은 우리를 참으로 참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복 70돌, 온 겨레가 함께 그 뜻을 기려야 할 때이나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를 크게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패권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평화와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며 민족의 역량을 최대로 모아내고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고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위' 부위원장이 '비합의 통일 연구'를 거론하는 등 흡수통일과 정권붕괴로 향해 있는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관계에서 언론의 역할을 고찰하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언론이 사람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조건에서 불확실한 추정이나 첩보에 기초하여 불신과 적대감만을 확대시키는 일각의 움직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남북 모든 민간단체의 방북이 가로막혀 있듯이 언론인들 역시 5.24조치로 인하여 방북취재가 차단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AP통신 등 외국 언론들이 평양에 지국을 내고 실시간으로 기사를 송고하고 있는 이때에, 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의 언론인들이 서로 방문하여 취

재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왜곡된 내용, 부정확한 사실들을 보도한다는 것은 언론인이기를 포기하는 태도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화해와 협력의 입장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단된 나라의 언론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추측과 왜곡으로 점철된 대북보도, 분열과 대결의식만을 확산시키는 대북보도 추세에 경종을 울리고, 지난 1995년 언론인들 스스로 만든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 2006년 남북언론인통일토론회 결의사항 등이 다시 언론인들 사이에서 환기되고 지켜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사말>

상식적인 남북관계 보도가 절실하다

정일용(6·15남측위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오늘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화두를 붙잡고, 누가 알아주든 말든, 묵묵히 용맹정진하는 동지 여러분, 모처럼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새삼 반가움이 솟아납니다.

어제, 8월 9일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9일에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해 수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고 다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도 수만 명이 죽었는데,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달리 주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조선 사람인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원폭 피해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을 뿐 그들의 죽음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마무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조선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일본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원인 제공을 한 일본은 물론이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원자폭탄 투하라는 반(反)인류적 범죄를 저지른 미국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특히 원폭 투하의 당사자인 미국은 조선인 피해자에게 아예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희생을 막기 위해, 하루라도 더 빨리 종전을 당기기 위해, 원폭 투하라는 충격 요법을 썼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다고 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을 한 사람에게는 살아남은 자들이 당연히 배려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최근 일본인들도 원폭 투하에 대한 미국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데, 나라 잃은 망국민으로

이역 땅에서 간난신고를 겪다가 목숨까지 잃고 만 자신들의 선조에 대해 정작 그 후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데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남북관계 보도, 민족문제 보도에서 유난히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측면이 눈에 띕니다. 이른바 '북한의 핵문제'(이런 용어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도는 국제사회의 불평등한 핵 역학관계를 떠나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가진 핵무기, 핵은 정의의 보검이고 북한이 가진 핵무기, 핵은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악마의 무기라는데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수만 명의 우리 선조들이 '정의의 보검'에 스러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핵 관련 보도만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하는 군사훈련은 방어적인 연례훈련이고 북쪽에서 하는 훈련은 공격적, 도발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상식에 들어맞는 말입니까. 일찍이 한 축구감독이 간파했듯이 최선의 수비는 곧 최상의 공격에서 비롯됩니다. 방어를 위해 적의 공격 원점을 타격한다면 이게 공격입니까, 수비입니까. 미국을 자유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고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G2 세계질서의 다른 한 축인 중국에서는 연례 보고서를 내 미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비판합니다. 인권이라는 민감하고도 보편적인 사안에서 100점 만점짜리가 어디 있고 0점짜리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좀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가 떠오릅니다. 누구나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한 소년만이 '임금이 미쳤나' 걱정이 되기도 해서 사실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도 집단적 광기에 휩쓸리면 정반대로 왜곡될 수 있으며 사실의 왜곡을 깰 수 있는 무기는 두려움 없이 힘차게 사실을 외치는 것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상식적인 남북관계 보도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봅시다.

발제 1	‘반북’으로 회귀하는 대북 보도 – KBS 9시 뉴스를 중심으로 –

김춘효(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언론학박사)

발제 2	변하지 않는 남북 적대의식 조장 보도 – 조선일보의 대북 관련 보도 행태 –

이용마(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MBC해직기자)

‘반북’으로 회귀하는 대북 보도
- KBS 9시 뉴스를 중심으로 -

김춘효(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언론학 박사)

1. 문제제기

미디어는 그 사회의 체제와 대중 개개인들을 연결하는 중개자적 기능을 한다.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및 가치체계는 미디어를 통해 개인들에게 연결된다. 미디어가 사람들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디어 소비를 통해 개인들은 사회적 여론을 인지 형성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간다(Smythe, 1981). 특히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는 사회적 이슈들을 선별하고 의제로서 설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뉴스에서 보여 지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가치체계와 정치경제 권력 구조에 따라 재구성된 현실이라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북한 관련 뉴스는 한국 근현대사의 권력이동과 가치체계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소재이다. 보수 언론 등 한국 언론사들은 일제 해방이후 정권과 유착관계를 통해 사세를 확장해 왔다. 군사 독재시절에는 정치적 정당성을 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권 차원의 특혜를 받았고, 민주 정부 시절에는 보수 세력의 정치적 확성기 노릇을 자임했다.

이처럼 기득권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한국 언론사들은 한반도 분단 문제를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해 왔을까? 특히 민주정부에서 보수정부로 회귀한 2008년 이후 한국 언론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의제 설정을 했을까? 이 주제는 중요하다.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보내는 이미지와 텍스트는 그 사회 기득권층의 가치체계가 일반인에게 전달되고 확산 공유되는 헤게모니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순, 2000).

이글은 한국 정치권력 이동 변화가 북한 뉴스 프레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집중한다. 미디어중 신문보다 현실을 규정하고 의제 설정 영향력에서 앞선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 단위로 한다. 글의 구성은 해방이후 남한 정권의 대북정책과 북한 보도

프레임과의 상관관계를 논의 한 다음, 2007녀부터 2015년까지 공영방송 9뉴스 분석을 통해 시장 보수정권의 북한 뉴스 프레임의 특징을 밝혀내는 순서이다.

2. 북한 보도 프레임과 남한 정권의 대북정책 (1948-2007)

앙트만(Entman, 1993)은 뉴스 프레임은 인지된 현실의 한 측면을 부각시켜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뉴스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뉴스 프레임 보도는 3가지 절차를 거친다.

첫 번째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특정 사안을 부각시킨다. 두 번째 절차는 미디어가 특정 사안을 그 사회의 가치체계에 기반,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다. 마지막 단계는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방안으로 보도를 한다는 것이다. 즉 뉴스에서 보여주는 현실은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가 아닌, 그 사회의 윤리성, 역사관, 권력관계 등이 포함돼 '재구성된 현실'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맥락에서 뉴스는 그 사회 현재의 지배적 가치가 무엇이고, 논쟁적 및 배제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좋은 문화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할린 (Hallin, 1986)은 뉴스와 그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뉴스의 영역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눴다. 뉴스에서 사회적 가치가 수용되고 배제되는 원리를 합의의 영역 (Sphere of concensus), 합법적 논쟁의 영역 (sphere of legitimate controversy), 일탈적 영역 (sphere of deviance)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재철 (2009)은 할린의 뉴스가치 3가지 영역 구분에 기초해 남한의 북한 보도를 설명하고 있다. 합의의 영역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의 영역이다. 미디어는 이 영역의 내용들을 반대하거나 방관할 필요 없이 일상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 준다.

예를 들면, 남북통일, 자유민주의 체제의 수호의 명제가 이에 해당한다. 합법적 논쟁의 영역은 정부, 정당,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 사회의 주요인물이나 조직이 제기한 논쟁적 사안의 영역으로서 다양한 시각과 기치들이 충돌하는 영역이다. 기존 가치체계를 수호하고자하는 사람들과 이에 반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남북통일이라는 명제를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와 같은 방법상의 문제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및 해당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정책결정과 실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탈적 영역에는 사회의 주류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배적 가치와는 다른 아이디어들이 존재하는 영역을 말한다. 그러한 아이디어는 해당 사회의 정치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영역에서 미디어는

일탈성을 노출하여 비판하거나 아예 그러한 시각을 논의과정에서 배제한다. 예를 들면 남북한 무력통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p.137).

이와는 달리, 한동섭 & 임종수(2002)는 할린의 3가지 구분중 합법적 논쟁의 영역에 대해 다르게 해석한다. 합법적 논쟁의 영역은 각 언론사가 지향하는 합의와 일탈이 부딪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즉 미디어에 있어 합법적 논쟁의 영역은 언론사가 인정하고 싶은 현실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합법이라고 보는 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일탈로 간주되어 부딪침으로써 그 사회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 북한 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해 뉴스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보수신문인 조선일보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 주기식 지원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상대적 진보주의를 지향하는 한겨레는 남북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석이라고 보도했다.

할린의 뉴스가치 모델은 허먼(Herman, 1993)의 정치권력과 주류 언론과의 관계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 허먼은 미국 외교정책과 미 주류언론의 뉴스 보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권력 밀착관계를 설명했다. 주류 언론은 저널리즘의 기본 역할인 감시견을 하기보다 정권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 보도를 양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권력이 경제 권력과 권력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구조 속에서, 기득권층의 이익에 반하는 보도행태를 유지했을 경우 생존할 수 없는 뉴스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을 설명했다. 허먼의 주장은 뉴스는 정권의 외교정책을 충실히 담아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정치권력 특성을 설명 할 수 있다. 뉴스는 지속적인 이슈 보도를 통해 지배적 가치를 강화하고 일탈적 행위를 배제시킴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뉴스 프레임 분석은 언론사가 추구하는 성향도 함께 분석 할 수 있다. 그 언론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뉴스 보도 제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지속적인 이슈 보도를 통해 각 사의 이념에 맞춰 지배적 가치를 강화하거나, 그 지배 가치에 위배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합법적 논쟁 영역으로 남겨두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관계 관련 보도 프레임은 할린의 뉴스 가치 이론으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대북 뉴스 프레임은 '반북 보도 프레임'과 '평화통일 뉴스 프레임'으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정권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즉 북한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대북 뉴스 프레임이 바꿨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선영, 2014).

예를 들면, 87년 이전 체제에서 대북관련 보도는 일탈의 영역이었다. 미국의 지원하에 집권하게 된 이승만은 반공주의를 국시로 제시하며 북진 통일을 외쳤다. 이후 계속된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에서 북한은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됐다. 이들 정권하에서 반공주의는 남한 사회를 지배하는 핵심 이데올로기였다. 반공주의에 기초해 북한 관련 보도는 남한 사회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냉전적 흑백 논리를 강화하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됐다. 반면 98년 들어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북한은 타도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한반도 통일을 함께 이뤄야하는 동반자적 관계였다. 이에 따라 북한 뉴스 프레임은 '통일 프레임'으로 바꿨다.

3. 반북 뉴스 프레임에서 통일 뉴스 프레임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광복이후 50년 가까이 유지된 '반북 뉴스 프레임'은 고질적인 북한 보도 문제점인 '편향성'과 '선정성'을 노출시켰다. 편향성은 북한의 부정적 묘사,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 고착화, 북한 사회의 희화화, 북한 실상 왜곡, 체제 우위적 권위주의 등이다. 선정성은 북한 실상에 대한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경향, 지엽적 사안에 대한 가십성 보도, 오보, 추측 보도, 왜곡보도, 미확인 보도, 확대보도, 전문성 결여로 인한 부정확한 보도 등이다 (하승희·이민규, 2012, p. 224). 이 같은 북한 보도의 선정성과 편향성을 유선영 (2014)은 '반북 보도' 뉴스 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 시키면서 희화화하면서 왜곡보도를 일삼고, 흥미위주의 가십성 추측 보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에 기초해 보도해야하는 저널리즘의 원칙이 무시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취재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사실, 북한관련 보도는 남북한 관련 스포츠 경기 중계 등을 제외하곤 간접 취재가 대부분이다. 취재 기자들이 북한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봉쇄돼 있다.

또, 뉴스 생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은 정부 발표, 미국 등 동북아 정부당국의 공식 발표, 외신, 북한매체, 탈북자, 방북 민간인, 국내외 정보기관 등으로 한정된다 (정재철, 2009; 한동섭·임종수, 2002). 이같은 북한 현장 접근 불가에 따른 사실 확인의 어려움은 추측보도, 타 언론사보도에 대한 추수, 과도한 경쟁 보도 및 집단주의적 동조 등의 북한 보도 행태들을 양상했다. 다시 말하면, 반북 뉴스 프레임은 언론사의 이념성향과 정부의 대북 정책과 언론정책의 규제 및 안보 상업주의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 남한이 절차적 민주주의 체제에 들어섬에 따라, 신문의 북한 보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비록 반북 뉴스 프레임은 바뀌지는 않았지만,

언론 자유 확대가 남북관계에 대한 보도에도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강경하고 맹목적인 반북주의에서 벗어나는 보도시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보도 관련해 언론계에서도 몇 가지 자발적 조치들이 있었다.

지난 95년 8월 김영삼 정부시절, '한국 기자 협회,' '언론노련 (현 언론노조)', PD 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과 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기초한 것이다. KBS와 SBS 제작 가이드라인 내의 북한관련 조항, 그리고 KBS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준비한 보도준칙 마련 등이다. 이 같은 북한 및 통일 관련 보도강령 마련은 보도의 객관성과 민족의 화합과 화해라는 큰 틀을 뉴스 프레임에 담아낸 것이다.

남북한 문제를 다루는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저널리즘 실천윤리로서 정확성, 진실성, 균형성, 중립성을 지키는 한편, 민족의 통일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민족 이념적 지향성을 어떻게 뉴스에 담아 낼 것이가에 대한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 될 수 있다 (정재철, 2009, p. 136).

이같은 뉴스 프레임 원칙들은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대북정책이 남북한 공존 전략으로 수정됐다 (주창윤, 2000). 김대중 정권은 대북 정책의 목표를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설정하고, 대북 정책 3원칙과 정경 분리 원칙이라는 변화된 틀 속에서 추진됐다. 대북 3원칙은 무력 도발 불용, 흡수 통일 배제, 화해와 교류·협력의 대북 정책을 말한다. 정경분리 원칙은 기존에 정치 군사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당국 간 대화가 중단 될 경우, 기업·종교·학술 등의 모든 교류가 중단되던 것을 방지하여 민간의 대북 교류는 당국 간 관계와 분리하는 것 이었다.

이 같은 남북한 화해 협력의 대북정책은 노무현 정부에도 '평화 번영 정책'으로 계승 발전했다. 노 정권은 불안정한 정전 체제 하에서의 상호 불신 및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한축과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또 다른 축을 병행 발전 시켰다 (신영석, 2008, pp. 271-422).

이처럼 민주 정권 차원에서 대북 정책 선회는 북한 보도 뉴스 프레임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TV 뉴스 프레임에 대한 한국 언론 연구원 (1998)에 따르면, 과거 냉전적이며 적대적 프레임에서 우호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프레임으로 변화했다. 즉 김대중 집권 전 언론은 보수, 반공/레드콤플렉스, 냉전 패러다임, 이분법적 메카시즘이었다면, 김대중 집권 후에는 통일/평화 지향적 공존의 논리, 탈냉전 패러다임, 이념 스펙

트럼의 확장과 개방으로 뉴스 프레임이 바꿨다 (정재철, 2009, p. 137 재인용). 예를 들면, 북한 체제 찬양이나 안보 위협적 뉴스는 여전히 '일탈적 영역'에 남아 있다할지라도, 평화통일이나 평화 공존, 화해협력은 '합의의 영역'에 포함됐고, 통일 방법론이나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 대한 뉴스, 국가보안법, 반공 이데올로기는 '합법적 논쟁 영역'에 진입해 치열한 논쟁이 이뤄졌다 (박정순, 2000).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대북 방송 프레임도 '통일 뉴스 프레임'을 유지했다.

홍정기 (2011)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하에서 북한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 분류에 따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첫째, 북한 관련 뉴스의 경우 인적 교류 등에 관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핵문제 등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됐다. 외부세계와 단절된 북한내부사회를 직접 취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북한 관련 뉴스는 각계각층의 대 북한 접촉을 통한 인적교류 부문으로 한정 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특징은 스케치보두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이다. 뉴스 정보원의 불명확성과 사실 확인의 한계 등으로 명백한 사실과 구체적인 분석 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각 언론 매체별로 정파적이고 공격적인 보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세력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친정부언론과 반정부 언론으로 나눠지게 됐다. 다섯 번째 특징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남북교류 및 화해와 협력' 등에 치중한 나머지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관련 뉴스보도를 지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선 북한 내부 정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언론이 잇달아 굵직한 정보를 쏟아냈지만 이를 확인하며 뒤쫓아 가야하는 국내 언론은 심각한 피로 증세를 보였다. 이를 정부가 대북 화해와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다 보니 관계부처가 이미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계문제나 권력 핵심부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뒤늦게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종이라면 정부로부터 거의 무한대의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외신기사의 인용보도 역사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대부분의 외신기사 보도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국내언론매체의 외신보도의 무조건식 인용보도태도가 북한관련 뉴스보도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했다.

다시 말하면, 뉴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연계된 가치 체계가 반영돼 언론에 의해 재구성된 현실이다. 뉴스는 또한 정

권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돼 있으며 정권의 정책에 따라 프레임을 달리한다. 남한의 대북 뉴스의 프레임은 정권이 군사 독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이양됨에 따라 '반북 프레임'에서 '통일 프레임'으로 바꿨다.

4. 보수정권의 대북정책과 뉴스 프레임 (2008-2015)

이번 장에서는 정치 지배세력의 교체가 대북 뉴스 프레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지난 98년부터 10년 동안 정권을 유지했던 남한 민주세력은 시장주의로 무장한 보수 세력과의 선거 대결에서 패했다. 정치권력의 교체는 대북 외교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8년 등장한 이명박 (2008-2012)과 박근혜(2013-현재까지) 정권은 민주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기보다 북한 고립화 정책으로 수정했다. 이같은 외교 정책 변화가 대북 뉴스 프레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대북 정책 변화가 뉴스 보도 프레임 분석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시기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다. 분석대상은 매년 8월에 반영된 'KBS 9시'에서 북한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것이다. 2015년은 8월 뉴스 대신 7월 뉴스로 대체했다. 'KBS 9시'뉴스를 선택한 이유는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뉴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뉴스는 KBS 뉴스 홈페이지 (http://news.kbs.co.kr)에서 수집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분석한 다음 구체적인 뉴스 프레임 분석과 정보원 분석을 함께한다. 이명박 정부 (2008-2012)는 민주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 발전하지 않았다. 북한을 한반도 평화 정착의 동반자로 인지하기보다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하고 대북 정책을 수립했다.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 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외교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라는 연장선에 다뤄졌다. '글로벌 코리아' 부문의 한 축이었다는 이야기다.

다른 한축은 한미관계의 복원이다. 즉 대북 정책은 미국의 동부아 외교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 당시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였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최우선의 대북 정책 선정하고 '비핵·개방·3000' 정책을 추진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이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여기에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도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2008).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하면서 북한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잠정적인 적으로 규정했다.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기존의 경제 협력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즉 핵포기와 경제협력을 연관해서 대북 정책을 수립 집행했다. 이는 군사 독재 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부활과 경제 우월주의가 결합된 대북정책이다.

뒤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권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이어 받았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 명명된 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남한과 북한의 독자적인 협상 창구를 마련하기보다, 한미 군사동맹 강화 속에서 안보를 우선시하는 전제하에 대북 정책을 수립했다. 이명박 정부처럼 경제와 연관된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수립하지 않고, 다만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 (예: 이산가족 상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일 정책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의 연장선에서 북한을 잠재적 적으로 규정하는 대북 정책을 수립했다.

이 같은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은 뉴스 보도 프레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표 1>에서 보여지 듯, 북한 관련 기사의 보도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민주 정권에 속하는 2007년 8월 한 달 동안 KBS 9시 뉴스에서 북한 관련 뉴스는 63개 가장 많았고, 2012년 5건으로 가장 적게 보도됐다. 그나마 보수 정권에서 가장 보도량이 많았던 2013년도 북한관련 뉴스보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북한 관련 소식들이 주류를 이뤘다.

이처럼 북한 보도횟수가 줄어든 것은 남북한 정상과 고위급 회담이 보도의 주류를 이뤘던 민주정부와 달리 보수정권은 북한과의 공식 만남을 대북 정책에 포함시키지 않아 행사 관련 스케치 기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KBS 9시 뉴스에 나타난 북한 체제는 경제난과 홍수 등으로 고통 받는 모습으로 묘사됐다. 여기에 김정일 국망 위원장의 방중과 방러 기사를 통해 북한 경제난을 부각시켰다.

또한 특이한 사항은 익명 정보원의 증가와 중국으로 탈출한 탈불자들이 뉴스 정보원으로 등장한 것이다. <표 2>에서 보여지 듯, 이명박 정권에는 익명 정보원을 활용한 대북 뉴스가 증가했고 탈북자들이 뉴스 정보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민규와 하승희 (2012)가 보수 신문이 익명 정보원을 활용해 북한 주민을 체제에 의해 억압 받는 프레임으로 보도한 것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1: 뉴스 프레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보도 기사량	63	23	48	53	15	5	25	6	6
북한체제 (북핵, 홍수, 화폐개혁, 공개처형)	5	3	2	30	7	2	2	1	4

이산가족.납북자. 관광객 피습	3	7	8	–	–	–	9	–	
남한 정치인 공방	9	–	2	–	–	–	–	1	
남북한 고위급 회담	24	2	9	–	–	–	–	–	
북한 지원 (경협)	13	4	13	4	3	1	10	–	1
기타(을지훈련, 주변국 정세, 스포츠, 황장엽)	9	7	14	20	5	2	4	4	1

<표 2: 정보원 (복수 계산)>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정부 (대통령, 관료, 의원)	40	13	23	21	9	1	16	1	1
외국 정부	3	4	7	8	1	–	1	1	–
북한 전문가	10	4	10	9	–	1	4	1	3
시민단체 등 일반인	7	–	6		4	1	6	–	–
외신	1	–	3	16	2	1	–	–	–
북한매체	3	3	10	8	2	2	4	–	2
탈북자	–	–	–	3	4	1	–	–	–
익명			4	16	–	–	2	1	–
직접취재(스포츠 경기, 여론조사, 납북가족)	14	7	8	4	1	–	3	1	–

2008년부터 15년까지 주요 이슈들은 안보 위기의식 조장과 북한 경제난에 해당하는 뉴스들이 많았다. 보수 정권 들어 북한 뉴스가 가장 많았던 2010년을 예를 들면 설명해 보겠다.

<앵커 멘트>

이 목함지뢰는 작은 충격에도 터져서 반경 2미터에 인명피해를 냅니다.

우리 군은 북에 전통문을 보내 재발을 막을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에 발견된 지뢉니다.

손바닥보다 큰 나무상자 안에 폭약이 들어있어서 말그대로 목함지뢉니다.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고 한국전쟁 당시부터 매설됐습니다.

가로 20, 세로 9, 높이 4센티미터의 나무상자 안에는 TNT 폭약과 신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뜨로찔'이라고 표기된 이것이 2백 그램의 TNT 폭약으로 폭발시 나무상자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반경 2미터 내의 인명 피해를 일으킵니다.

밟으면 터지는 압력식과 선을 연결해 터뜨리는 방식이 있는데, 15킬로그램 이상 압력에 폭발하지만 안전핀이 제거될 경우 1킬로그램 압력에도 터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지뢰를 포함해 임진강 쪽에서 발견된 지뢰는 안전핀이 제거된 채 부식돼 매설된 지뢰로 추정되는 반면, 강화도쪽 지뢰는 안전핀이 모두 달려있어 보관중이던 지뢰가 떠내려온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당국은 북한이 일부러 떠내려 보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휴가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오늘 오후 군 전통문을 통해 재발방지를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군 당국은 지뢰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발견시 조치요령에 관한 홍보자료를 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위에 목함 지뢰 발견 보도에서 추정되 듯, 익명의 뉴스 정보원을 활용해 목함 지뢰가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같은 보도 행태는 2011년 8월에도 발견 된다.

<앵커 멘트>

오늘 오후 1시쯤 북한 용매도 해안에서 해안포로 추정되는 포성이 3차례 울렸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북방한계선 선상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포탄이 발사된 용매도와 연평도 사이의 거리는 19킬로미터,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연평도에서 불과 8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군은 30분 후 북측에 경고 통신을 한 데 이어, 오후 2시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리포트>

K-9 자주포 3발을 북쪽으로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북한 포탄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는지는 오차 범위 문제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NLL 선상에 떨어졌기 때문에 대응 사격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고 사격에 앞서 연평도 주민들에게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처 대피령을 듣지 못한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포성에 놀랐고, 면사무소에 문의 전화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일단 북한이 해안포 발사 훈련을 한 것으로 보고, 왜 북방한계선까지 해안포를 쐈는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또 북측 움직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지만, 아직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의 보도에서 보여지 듯 KBS의 대북 뉴스 프레임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 프레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북한은 호전적인 군사 국가로서 묘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뉴스 프레임이다. 이는 군사독재 정권시절

남한 언론이 즐겨 사용하던 '반북프레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 8.15 축사에서도 반북 프레임이 묻어난다. 남북간계의 긴장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면서 시혜자적 입장을 표명해, 남한 정부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을 깡패 이미지화 시키고 있다.

<앵커 멘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를 일으킬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한반도 신평화구상, 000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과감한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남북 경제 공동체 고위급 회의 설치와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주민생활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와 함께 재래식 무기 감축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언제,어떠한 수준에서도 모든 현안에 대해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대화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대선 공약인 이른바 "비핵 개방 3천불 구상"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마음을 열고 핵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할 지 관심입니다.

이같은 남북한 대결구도의 뉴스 프레임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발견된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경제 지원 등을 안보와 연결시키지는 않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접근을 시도한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휴전선 세계평화 공원 조성, 작은 통일론 등 구호성 대북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8.15 축사에서 밝힌 담화 내용을 살펴보자.

2014년 8월 15일 KBS 북한 관련 뉴스

<리포트>

남북 관계 돌파구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작은 통일'론입니다.

작지만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입니다.

<녹취> 박 대통령 :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한 하천과 산림의 공동 관리, 이산가족 상봉과 민생 인프라 협력이 핵심 내용입니다.

문화 유산 공동 발굴과 광복 70주년 문화 사업의 공동 준비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드레스덴 선언'의 연장선으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과 교황 방한,아시안 게임 북한 참가 등 일련의 흐름에서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포석입니다.

하지만 북핵에 대해선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북한은 분단과 대결의 타성에서 벗어나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합니다."

이번 제안에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도 흡수통일 논리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멘트>=2013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세계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북한의 호응도 촉구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흙 다시 만져보오자"

취임 이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음 달 추석 전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구상도 북한에 공식 제의 했습니다.

평화공원이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새로운 기점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박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들에게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설명해왔지만, 북한에 직접 제안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 제안은 북한의 화답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000입니다.

위에서 보여 지듯 KBS 9시 뉴스의 대북 뉴스 프레임은 북한을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남한 국민들의 삶의 고통스럽게 하는 원흉으로 묘사하고 있다.

4. 결론

북한 뉴스는 한국 기득권 세력의 가치 체계를 강하게 반영하는 문화상품이다. 정권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 뉴스 프레임이 바뀌기 때문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미국의 지원 하에 정권을 잡은 이승만 정권은 반공 이데올리기를 주요 통치 수단으로 삼았고,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군사 독재시절이 장기화 되면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해야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으로 뉴스에서 묘사됐다.

이같은 정권의 대북 정책에 맞춰, 남한 언론은 반북 뉴스 프레임을 고착화 시켰다. 이 같은 반북 뉴스 프레임도 민주정부 수립 10년 동안 수정되는 듯 보였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 설정하고, 대북화해 정책을 표면화함에 따라 남한 언론의 뉴스 프레임은'통일 프레임'(민주정부:통일/평호지향적 공존의 논리, 탈냉정 패러다임, 이념 스펙트럼 확장)으로 바꿨다.

남북문제를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연계해 종속 변수로 다루기보다, 남북한 정책 당국자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북한 뉴스 프레임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민주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을 거부하고 반북 이데올로기를 국내 정치로 활용하면서부터 남한 대북 뉴스 프레임은 다시'반북 뉴스 프레임'(반공/레드콤플렉스, 냉전 패러다임, 이분법적 메카시즘)으로 회귀했다.

남한 언론에서 북한은 다시 호전적인 적대국가로 분류된 것이다. 할린의 뉴스 가치 모델 기준으로 보면 북한 관련 뉴스는 합법적 논쟁의 영역에서 다시'일탈적 영역'으로 퇴보한 것이다.

참고문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 서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정순(2000). 뉴스의 객관성과 이념성: 남북화해시대 남북 언론의 대립과 변화.

『언론과 사회』, 29, pp. 6-42.

-배성인(2006). 북핵 문제 관련 방송 3사 저녁뉴스의 외신인용 보도 실태. 『북한연구』 9, 51-61.

-신영석 (2008). 역대 정권의 통일 정책 변천사.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2008). 서울: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우승·전영선 (2006). 국내방송의 북한관련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KBS의 9시 종합뉴스와 남북의 창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0(1), 257-281.

-이준웅 (2004). 언론매체 이용 및 해석적 틀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48(1), 28-56.

-유선영 (2008). 북한 및 통일 관련 방송 보도 방향 제언. 한반도 통일정책과 KBS의 역할 (pp.142-148). 서울: 한국방송 보도국 북한부.

-정재철 (2009). 남한 방송의 북한 보도 생산자 연구: KBS와 MBC 북한 문제 담당기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8, 135-152.

-주창윤 (2000). 북한관련보도의 반성과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방송 영역. 한국 언론정보학회세미나 발표 논문.

-하승희·이민규 (2012). 북한주민 생활 실태에 관한 국내 신문보도 프레임 연구: 조선일보,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58, 222-241.

-한동섭·유승현(2008).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익명정보원에 대한 연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4), 702-739.

-한동섭·임종수 (2002). 미디어 정보원 진술 활용과 현실정의: 미디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쟁점이 되는 뉴스 아이템의 정보원을 어떻게 가공하고 선택하는가?, 한국언론학보, 46(3), 520-556.

-홍성기 (2011). 『북한관련 뉴스보도 현황: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인권 및 안보관련 뉴스보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Entman, R. (1993). Framing: Toward a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8.

-Hallin, D. (1986). *The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erman, E. (1993). The media's role in U.S. foreign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7(1), pp. 23-45.

-Smythe, D. (1981). *Dependency Road: Communications, Capitalism, Consciousness and Canada.* Norwood, NJ: Ablex.

변하지 않는 남북 적대의식 조장 보도
- 조선일보의 대북 관련 보도 행태 -

이용마(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MBC해직기자)

1. 들어가며

올해로 해방 70주년이자 동시에 분단 70주년을 맞았다. 이미 24년 전인 1991년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국제 사회의 냉전 체제는 해체되었지만 남북관계는 좀처럼 해빙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등을 거치면서 한 때 남북관계는 많이 개선되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설립 등이 이루어지면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천안함 침몰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는 사실상 중단되었고 북한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주변 4강을 포함한 6자 회담 역시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남북은 상호 비난전에 몰두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적대적 관계로 빠르게 회귀해 버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인식도 호혜적으로 바뀌는 듯 했지만, 지금은 상호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돌변한 것은 보수 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해온 협력적인 대북 정책을 전면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곧바로 백지화되기도 했다.

보수 정부가 이와 같이 대북정책을 급속도로 바꿀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의 여론조작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보수 언론들은 과거 군사정부 이래 지금까지 북한의 남침 위협을 과장하고 북한의 집권세력인 김일성 일가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지속해왔다. 이 상황에서 대북 화해협력을 주장하면 소위 '종북세력'으로 매도되어 온 것이다. 이로 인해 남한에서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보다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어 왔다.

그런데 보수 언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가 대북 관련 보도에 다소 변화를 보여주었다. 지난해 '통일이 미래다(One Korea, New Asia)'라는 연속 기획보도를 내놓으면서 기존과 다른 보도 양상을 보여준 것이다. 연속 보도 이전의 대북 관련 보도는 오로지 안보적, 이념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성향을 보였다. 반면 연속 보도에서는 이런 관점을 벗어나 경제적 측면 그리고 통일 이후의 한반도라는 관점에 주목하는 시각의 전환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일보의 달라진 보도 행태는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대북 보도행태는 정말로 바뀐 것일까? 이제는 과거추수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내용을 접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4차례에 걸쳐 보도된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와 이 보도 이후 조선일보의 대북 관련 보도의 변화상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다. 연속 보도 이후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3개월, 즉 201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조선일보의 대북 관련 보도 180여 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통일이 미래다' 연속 보도의 이중적 접근 방식

조선일보는 2014년 1월 1일부터 7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 '통일이 미래다(One Korea, New Asia)' 시리즈를 보도했다. 이 연속 보도는 모두 4부로 이루어졌다. 1부에서는 모두 10회에 걸쳐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각 분야별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통일 한국의 긍정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3부에서는 4회에 걸쳐 독일 통일의 전후의 과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의 통일 전략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 2부(4회)와 4부(3회)에서는 탈북자들과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해, 이들이 바라보는 통일관, 북한 내부의 정치, 경제적 인식 수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일 한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연속 보도의 상당수 내용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등 비교적 객관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해 이루어진 연구 결과이다. 이 연구를 통해 통일 한국이 2030년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G7의 대국이 될 것이고, 주변국들도 막대한 투자를 통해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또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해 급속히 통합될 경우 통일비용이 4,000조원을 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요컨대 남북한이 점진적 통합을 이룰 경우 그 비용보다 통일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의 연속보도는 기존의 대북 보도 행태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

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최근 이 연속 보도를 통일언론상 후보로 추천하면서 제시한 공적설명서에도 조선일보의 관점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조선일보는 과거 안보적, 이념적 통일 담론에서 벗어나 통일 문제를 미래 비전과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통일이 경제·사회적으로 남북 모두의 삶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아시아 공동 번영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 과학적 연구 분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경제·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통일이 가져올 이익을 구체적 수치와 데이터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어느 언론매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의 보도행태와 비교하면 획기적이다. 기존에는 조선일보 스스로 인정하듯이 안보적 관점 그리고 이념적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접근하면서 대결의식만 부추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즉 6.25 한국 전쟁이 발생했던 과거 시점의 적대적인 시각에서 서로를 무너뜨려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사로잡혀 있던 이전의 보도행태와 확연히 차별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 연속보도에서 나타난 조선일보의 변화는 통일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연속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1부/3부와 2부/4부의 보도 행태가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에 따른 한반도의 경제적, 정치적 전망(1부) 등이나 독일 통일을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대목(3부) 등에서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사실 위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를 비롯한 현 북한에 대한 인식 수준은 2부/4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존의 과거지향적인 관점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조선일보에게 통일 전망은 장밋빛이지만, 통일 전략은 지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즉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점진적 통일을 추구할 것인지, 김정은 체제와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서서히 변화시킨 뒤 보다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도록 유도할 것인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뒤 대화를 통해 점진적 통일을 추구할 것인지, 북한에 급변이 발생해 김정은 체제가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하다. 한마디로 급변 사태에 따른 급속한 통일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현재의 김정은 체제를 대화 상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다. 이 대목에서 조선일보의 보도는 기존의 방식으로 급속히 회귀하고 있다. 즉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와 북한 내부의 반체제 분위기를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거 회귀성향의 보도 행태는 탈북자와 재중 북한인들의 인터뷰에 의존한 2부와 4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먼저 북한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분석이다. 조선일보는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들은 대부분 통일을 바라고 있지만, 북한의 중앙당 간부를 비롯한 지배세력은 체제 유지를 위해 통일보다는 분단 상황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도 처음 "무력통일론에서 연방제, 2체제 2정부"를 주장하는 등 점점 더 분단체제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해설도 덧붙이고 있다.[1]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과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 등의 인터뷰를 끼워 넣고 있다.

>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에서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집단이 김씨(김일성 일가) 3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김정은 등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은 현상유지 심리와 기득권 상실 및 흡수 통일에 대한 우려 등으로 통일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이 점차 분단을 고착화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도 그 같은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도층 내에 김정은과 가까운 사람이 나서는 '궁중 쿠데타'라고 했다.(2014. 2. 3)

>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층은 통일에 반대한다. 자신들이 통일을 통해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신흥 부유층은 북한의 대외 개방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시장이 개방돼서 남한이나 다른 서구 자본이 들어와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북한이 고립되고 폐쇄된 국가로 남아 있어야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14. 2. 3)

그런데 유성옥 소장은 국정원에서 26년 간 일하며 반북 의식이 강한 우파 성향의 인사이고 에버라드 전 대사 역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담당하는 전문가 자문위원을 지낸 매파 인사이다. 북한이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해석하면서 오로지 비슷한 성향의 반북 인사들의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 대단히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또 김정은 정권을 통일반대 세력으로 몰기 위해 유 소장이나 에버라드 전 대사 이외에도 탈북자들의 응답(북한에서 통일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중앙당 간부 82.5%, 군부 7.5%)을 들고 있다. 조선일보는 4부에서도 김정은이 자기가 대통령을 못하니까 통일을 반대한다는 재중 50대 북한 남성 단 한 명의 말을 부각시켜 보도

1) 사실 북한의 통일방안은 조선일보의 주장과 정반대로, 북한의 통일방안이 궁극적으로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적화통일' 방안이라는 남한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남북한의 독자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왔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고 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경우 극단적인 반김정은 체제 성향을 띨 수밖에 없고, 이들의 주장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나 기대를 해석하는 대목도 지극히 자의적이다. 북한의 권력층이 실제 통일을 원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통일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실제 조선일보가 탈북자와 재중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각각 80%와 95%가 북한 주민은 통일을 원한다는 답변을 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에 통일을 찬성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탈북자 절반 이상 그리고 재중 북한 주민 100명 중 34명이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한 탈북자들의 인식이나 재중 북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북한의 일반 주민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크게 간과하고 있다.

재중 북한 사람 100명에 대한 조선일보의 인터뷰 결과도 그 객관성이 불투명하다. 먼저 인터뷰를 한 당사자는 <통일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이다. 그런데 이 단체는 현 정부와 가까운 정치적 성향을 갖고 대북문제에 고전적인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어 객관적인 인터뷰가 가능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또 중국에 머물면서 새로운 체제의 경험을 한 북한 사람들이 과연 북한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일보는 통일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과 주민을 이처럼 자의적으로 분리한 뒤, 북한 내부의 변화상, 특히 자본주의와 남한 문화의 침투에 대한 일부 출처분명의 소문을 사실로 둔갑시켜 과장 보도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대내 통제능력을 상실하고 주민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것처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 북한의 대외무역과 시장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5만~10만 달러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24만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10일 “북한의 각종 경제정보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과거 출신 성분을 중시했던 데서 벗어나 개인의 사경제 능력에 따른 새로운 계층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2014. 2. 11)

> 북한에서 남한의 TV방송 시청권에 있는 주민은 1,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북 소식통은 “평북 신의주!강원도 원산 이남으로 남한에서 내보내는 TV 방송의 수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부 당 간부는 10만 달러(약 1억여 원)가 넘는 고급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가 하면, 기관·기업소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4. 2. 11.)

북한 내부 사정을 분석하면서 그 근거는 대부분 출처가 모호한 “북한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이거나 “대북 소식통”이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는 내용들이다. 사실 ‘소식통’은 북한에 대해 근거 없는 보도를 할 때 자주 인용된 출처이다. 조선일보는 또 “알려졌다”는 표현을 통해 소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알려졌다” 혹은 “전해졌다” 등의 표현이 뜻하는 바는 그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이란 사실임을 아는 독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선일보는 “통일이 미래다”라는 연속 보도를 통해 통일을 해야 하는 경제적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비교적 성공했다. 하지만 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과거 회귀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즉 북한 정권을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하고, 북한 체제가 점진적인 시장경제의 침투 등에 잠식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 점차 고립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원하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을 이들로부터 해방시켜, 통일 한국의 장밋빛 전망을 실현시켜야 할 의무가 남한에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일보의 거창한 통일 기획 시리즈에 대해 “변형된” 혹은 “보다 세련된 흡수통일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3. 연속 보도 이후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

2014년 ‘통일이 미래다’라는 연속 기획 보도 이후 조선일보의 북한 관련 보도에는 변화가 있었을까?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 변화는 조선일보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의 선두 주자라는 점과 조선일보가 현 정권을 비롯해 보수층의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현실로 인해 주목할 대상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일보의 대북 관련 보도 행태는 2014년 연속 보도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앞으로도 당분간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의 보도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조선일보에 게재된 북한 관련 보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북한 관련 보도는 모두 182건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2일 동안 하루에 평균 두 건 이상의 북한 관련 보도가 실릴 정도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조선일보가 연속 기획으로 실시한 리더십콘퍼런스 등에 포함된 북한 관련 기사나 탈북자 인터뷰 기사 등을 포함할 경우 북한 관련 보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사실 조선일보는 이전부터 북한에 대해 다른 어떤 매체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조선일보에서 만드

는 TV조선의 경우도 북한 관련 소식을 대단히 많이 보도해 오죽하면 진짜 “종북방송”이란 우스개가 나올 정도이다.

조선일보에 석 달 동안 게재된 기사 182건을 분류해보면 먼저 현영철 등 고위 인사 숙청이나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설, 북한 인권 문제 등 김정은 체제를 비난하는 기사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평해전과 6.25 관련 보도는 39건, 미사일 발사나 NLL 침범 등 유무형의 북한 위협을 강조하는 보도가 27건, 북한의 대외 접촉 관련 보도가 17건,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압박 11건 등이었다. 또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 연속 기획을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가 30여 건 이상 보도되었다.

최근 조선일보의 나눔 보도 행태는 2014년 ‘통일이 미래다’ 연속 기획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을 끌어낸 점을 자체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삼성과 현대, SK 등 대기업까지 끌어들여 경제적 관점에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이끌어내 통일을 이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펀드 모으기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일보의 기획은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된 국면에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특히 과거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 보수층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눔 행사를 제외하면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조선일보의 보도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앞선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북한 관련 보도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남북 간의 과거 물리적 충돌을 상기시키는 보도이다. 한마디로 남북 간의 적대적 대결의식을 조장하거나 확대재생산하는 보도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김정은 일가에 대한 파파라치식 보도 행태는 상대에 대한 헐뜯기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보도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출처나 근거를 알 수 없는 “소식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령 기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음은 2015년 7월 2일 조선일보의 1면 톱 기사이다.

>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恐怖)정치가 계속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당(黨)·정(政)·군(軍) 간부들의 탈북(脫北)과 망명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

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에 파견됐던 간부와 외화벌이 일꾼 등 10여명이 최근 망명했다"고 전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국내에 들어왔으며 일부는 제3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에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에서 홍콩에 파견됐던 중견급 간부가 가족과 함께 망명,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 고사총(대공기관총) 처형 등 잔인함에 공포를 느꼈다"며 "북한 내 간부들은 감시가 심해 탈출이 어렵지만 해외에 나간 사람들은 망명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고위 장성 1명도 최근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 장성은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도 관여했던 고위직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이 장성의 탈북 사실을 미국 쪽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을 담당하던 조선대성은행의 간부가 수백만 달러를 들고 망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의 국정원 격인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간부도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 2월 "김정은이 '튀다 튀다 보위부까지 튄다'는 말을 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국정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총살된 당·정·군 간부가 7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2015. 7. 2)

보도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해 당, 정, 군의 고위 간부들이 망명해 일부는 이미 국내에 들어왔다는 내용까지 있다. 이 정도 되면 김정은 체제가 거의 붕괴 직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일보도 내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면 톱 기사로 배치를 했다. 그런데 이 보도를 자세히 보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기사는 모두 1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다는 내용의 마지막 두 문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10문장은 모두 “소식통”,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소식통”은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 대한 보도처럼 국익 등의 이유로 출처를 그대로 밝히기 어려울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우리의 경우 군사정부 시절 정보기관이 언론에 필요한 내용을 흘릴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정보기관이 언론 플레이를 해온 방식이다. 이 “소식통”이 흘린 내용은 북한과 관련된 것이 많아서 언론이 자체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기사에서 “알려졌다”나 “전해졌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소문을 의미한다. 언론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이런 소문도 있다는 식으로 피해가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를 뒤흔드는 엄청난 기사를 1면 톱으로 배치하면서 불분명한 출처의 소문 이외에 확인된 표현이 단 한 문장에도 없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보도행태인가.

조선일보의 무책임한 보도행태는 바로 입증되었다. 이 날도, 그리고 다음날도, 그 후에도 북한 장성과 간부 10여명 망명설은 그 어느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간부와 관련된 얘기 역시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대해 오보인지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갔다.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북한 간부의 국내 망명 여부를 모를 리 없는데도 정부는 이 기사의 진위를 전혀 확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조선일보와 함께 일부러 이런 보도를 내보내지 않았느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이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감정 폭발로 당청 간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선일보 보도가 이런 방식이라는 점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난이나 김정은 일가에 대한 파파라치식 보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과장보도 등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와 현재,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다음은 조선일보 2015년 5월 16일자 4면 톱 기사이다.

> 북한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에 대해 침묵하는 가운데 북한군 간부들이 군 내부 정치 강연에서 "현영철이 수령(김정은)의 영도를 거부하고 최고 존엄을 모독한 죄로 처형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는 북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중 국경지대 부대의 북한군 장교 대상 강연에서 현영철은 '독단과 전횡의 군벌주의자'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탈북군인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도 이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4월 30일 오전 평양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처형된 게 맞다"며 "다만 북한군 내부의 반감과 동요를 우려해 아직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 이와 관련,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강건종합군관학교 강당에서 '인민군 및 인민보안부 지휘관 회의'가 소집됐으며, 여기서 현영철을 반당 반혁명 분자로 낙인찍은 뒤 곧바로 처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정은은 최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군 고위 간부들을 데리고 제810군부대 산하 신창양어장을 시찰한 것으로 15일 보도됐지만, 현영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 김정은이 지난달 18일 황병서 등 측근들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을 때 현영철 처리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정은은 2013년 말 장성택을 처형하기 보름 전인 2013년 11월 말 황병서·김원홍 등을 데리고 양강도 삼지연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지난 4월 현영철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비리 조사를 하고 대책회의도 했을 것"이라고 했다.
> 북한군 장교 출신의 탈북자 김철추씨는 "현영철은 김정은이 인민 생활은 팽개치고 군부 시찰만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며 "직언을 하다 처형된 것 같다"

고 했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이날 "현영철은 북·중 국경 부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해 중국의 발전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라며 "각종 군사 회의에서 중국의 개혁과 세계 정보화 흐름을 소개하다가 군부 강경파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북한과 관련해 보도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즉 막연한 “소식통” 대신 다른 언론매체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배경과 관련해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를 인용했다. 그런데 데일리NK의 존재에 대해 아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데일리NK는 2004년에 창간된 우익 성향의 반북 인터넷 매체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 매체에서 출처분명의 “북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방적으로 전한 보도를 조선일보가 다시 인용해 추정보도를 한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탈북자 김철추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말 역시 개인 차원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조선일보가 북한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타 매체를 인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매체들은 대부분 실체가 불분명한 우익 성향의 매체들로 북한체제에 대해 극단적인 비난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런 매체를 빌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인 양 확대보도하는 것은 단순히 관성적인 보도라고 치부하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남한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조차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보획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단적인 예가 김정은의 방러 관련한 국정원의 예측 보고이다. 지난 4월 29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을 전달했다. 러시아와 북한, 양측의 여러 정보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다. 모든 언론은 국정원발 기사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만인 4월 30일 러시아발 외신을 통해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우리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이 수많은 정보를 토대로 내린 결론조차 이처럼 빗나가는 상황에서 그 실체도 불분명한 반북 매체나 일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는 위험천만의 일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통일이 미래다’ 연속 기획보도 이후에도 북한과 관련된 일상적인 보도에서 이런 행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4. 나가면서

조선일보가 2014년 1월부터 ‘통일이 미래다’(One Korea, New Asia) 연속 기획보도를 한 것이나 그 연속선상에서 올해는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 연속 기획을 시작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 취지가 무엇이든 남북 관계와 통일 한국에 대해 미

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변화된 시각이다. 이것은 과거지향적이고 대립적 관계를 유지했던 지금까지의 보도행태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일반적인 대북관련 보도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 너무 강한 것이 또한 현실이다. 북한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북한의 침공위협을 부각하는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작년의 연속 기획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지배층과 주민을 구분하고, 북한 지배층을 악마로 묘사하는 보도행태는 지속되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보도가 대부분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심각하다. 북한 관련 보도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상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보도도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남한 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은 더욱 조장 내지 확산되고 있고 조선일보가 기획하고 있는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나눔 운동과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폐쇄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북한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그 시스템을 알기는 쉽지 않다. 북한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것이나 제3국과의 외교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일부 탈북자들이나 북한 방문자들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것이다. 보다 간접적인 방법은 통일부나 국정원과 같은 우리 정부 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이다.

이 중 탈북자나 북한 방문자의 정보는 한 차례 걸러서 들어야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한 측면도 많다. 이들은 극단적인 반북 혹은 친북이라는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 오염된 정보를 제공하기 쉽다. 우리 정부 기관 역시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북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일가에 대한 '삐딱한' 관점을 갖고 정보를 수집할 경우, 그 정보에 대한 해석과정에 중대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언론의 보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냉정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실 위주로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불확실한 정보들만 취합해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지금까지의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방식의 보도행태에서 벗어나려면, 통일 대박론을 부르짖으며 몇 가지 이벤트성 기획보도를 하는 차원을 벗어나, 먼저 일상적인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한 보도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일보가 아무리 진정성을 호소해도 '통일대박론'에서 주장하는 점진적 통합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급속한 붕괴를 통해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노림수로 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벌써 해방 70년, 분단 7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남북의 이질성은 심화되었고 남한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 이점에 대해 새롭게 설파하고 나선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이 고민은 현재의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어떻게 점진적인 남북통합의 길로 갈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이는 공허하다. 잘못하면 자본의 논리만을 내세워 북한 체제의 급변을 초래해 득보다 실이 많은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토론 1	김정환(KBS 기자)
토론 2	김치관(통일뉴스 편집국장)
토론 3	심영섭(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토론 4	장용훈(연합뉴스 북한전문 기자)
토론 5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론문>

KBS 보도의 변화는 민주정권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
김춘효 정책위원의 '반북'으로 회귀하는 대북 보도를 읽고

김정환(KBS 기자)

1. '뉴스에서 보여 지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가치체계와 정치경제 권력 구조에 따라 재구성된 현실'이다,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보내는 이미지와 텍스트는 그 사회 기득권층의 가치체계가 일반인에게 전달되고 확산 공유되는 헤게모니적 기능'이 있다는 지적은 100% 공감

(1)한 측면에서 얘기하면, KBS 보도는, 특히 지금처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어느 정파의 정권 획득에 따른 전리품처럼 여겨지는 현 상황에서는, 심지어는 적잖은,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도 없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현 상황에서는, 딱 지금 수준의 보도밖에는 할 수 없다.
뒤집어 얘기하면, KBS 보도의 변화는, 1차적으로는 정권 교체, 2차적으로는 독립성의 철저한 보장이 있기 전에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2)내부의 노력, 저항이 없었나? 있었다. 결과는? 부분적 성과 있었지만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 너무 크다.
외부, 언론 단체 등에선 뭐 했나? 도우려 했지만 역시 큰 성과 없었다.
국민들 뭐 했나? KBS에 대해 역시 갈라진 생각들이다.
재미없고 소극적인 결론이지만, 북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미 관계 등에 대해 KBS의 달라진 보도를 원한다면 민주정권으로 바꿔라 그나마 그게 가장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확실한 건 아니다. 두 차례의 경험으로 볼 때 그나마 그렇다는 거다.

2.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 북한 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해 뉴스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보수신문인 조선일보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 주기식 지원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상대적 진보주의를 지향하는 한겨레는 남북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석이라고 보도'했다고 분석했는데,

여기에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1)어쨌든, 조중동이 비난하건 난리를 치건, 정권 담당자가 돼야 한다. 그리고 정책

을 밀고 나가야 한다. 국민은 대체로 지지하거나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물론 그 정책의 정당성을 잘 설명하고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거다.

(2)정권을 잡은 이가 KBS를 확실히 독립시킬 것이 아니라면, 그나마 KBS 보도가 괜찮다. 나쁘지 않다. 중립적이다. 이런 뉴스를 보려면, 상대적으로라도 덜 나쁜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KBS 보도는 정권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 김대중 정부 때는 좀 더 직접적이고 심했고(박권상 사장), 노무현 정부 때는 간접적이고 엄청 완화됐지만, 그 영향은 있었다.
만약(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대통령이 KBS 보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공개적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실천했다고 치자(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어떤 대통령'에 가장 가까웠다) 그렇다고 KBS 뉴스가 확 좋아지느냐, 독립적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전까지 해온 습성을 쉽게 못 버린다. 상당 기간 청와대 눈치 보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다. 두 번째 민주정권이 들어섰지만, KBS 보도가 확 변했나? 물론 이전과 바뀐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니다. 특히 시사 PD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은 신선했고, 논란을 일으키면서 KBS의 변화를 선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도본부는 그렇지 않았다 못했다. 왜?

(3)'관성'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력'이다.
1973년 KBS는 공사, 공영방송이 됐다. 공채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이어졌고, KBS는 무늬뿐인 공영방송, 사실상 국영방송, 정권 홍보방송이었다. 노태우 정권 때도 크게 변할 수 없었고, 김영삼 정부 때, 약간의 변화랄까, 이때부터 이른바 뉴스 시청률 경쟁에서 조금씩 다른 방송사를 앞서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경험한 조직의 성격이 불행하게도 KBS의 바탕이 됐고, 그 당시의 인력들이 여전히 KBS의 주요 자리에 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초기 공채 출신 선배들은 퇴직이나 퇴사하기도 했지만, 그들 밑에서 KBS 보도 방향과 '기법'을 체험하고 익힌 후배들이 지금의 KBS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지금 KBS의 주류인 이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기자들, PD들, 예를 들어 새노조에 가입한 이들이 KBS의 주류가 되거나,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져야 하는데, 가능할까?

그렇다고 이른바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인적 청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시 강조하는데 제3기 민주정권으로의 정권 교체다. 그 정도의 정치 변화가 있다면, KBS는 역사적 속성에 따라 새 대통령의 눈치를

살필 것이고, 그에 부합하는 보도를 하려 할 것이다.

냉소적이고 소극적으로, 재수 없게 들리겠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현재로서 가능한 KBS 보도의 개선은 이 정도다 솔직하게 얘기하자. 권력을 잡은 이가 KBS를 내놓을까? 스스로 내놓지 않으면 국민이 강제해야 하는데 국민이 나설까? 그게 가능할까?

3. '<u>익명 정보원의 증가와 중국으로 탈출한 탈불자들이 뉴스 정보원으로 등장</u>', 이건 당연한 결과, 예견된 참사다.

(1)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KBS 내부에선 새노조를 중심으로 뭉쳤고 저항했고 버텼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무너졌다.

MB 정권 초기 있었던 인사 이동을 통해 김춘효 위원의 분석을 살펴본다. 당시 통일부와 외교부를 각각 2명 씩, 모두 4명의 취재 기자가 맡고 있었다. 통일부와 외교부 1진은 '예비전문기자'로, 노무현 정부 때의 정연주 사장 당시 기자들이 밀고나간 보도본부 개혁안의 상징적인 결과물인 '전문기자제' 과정에 있는 기자들이었다.

인사 이동 결과는 이렇다. 통일부 외교부 기자 4명 전원 타부서로 배치 '당했다' 쫓겨났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2명이 나간 부서의 취재 기자를 인사 이동할 때, 2명을 동시에 모두 바꾸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통일부 외교부 4명을 다 빼버린 경우는, 내 기억엔 없었다. 왜? 정연주 사장 때,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것들은 다 싫어서 그랬다는 얘기가 한참 돌았다.

이후에 온 기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다 특정 분야의 전문 기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분야의 취재 네트워크를 쌓아가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그 분야의 돌아가는 일들을 그래도 조금은 잘 아는 기자와, 가라고 해서 온 기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2)특종 아닌 특종들

4. KBS 보도본부가 실행했던 '전문기자제'가 대안이 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전문기자제'가 자리를 잡았더라면, 북한과 남북 관계 등 특정 분야는 지금과는 좀 다른, 덜 비난받는 보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사측이 그런 보도들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라는 의문이 따르긴 한다.

'전문기자제'는 정연주 사장 당시 순전히 기자들이 요구했고 관철시킨 KBS 보도본부

개혁안의 하나로, 다른 주요한 개혁안이 실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상징적인 제도였다 통일, 외교, 국방, 금융,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기자를 키우고 있었다. 두고 두고 아쉽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제도화'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1987년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가 진행됐고, 상당히 완성됐다. 그리고 지금, 폐해랄까, 역설을 강하게 느낀다 .

KBS도 마찬가지다. 도덕적 흠결이 있건 없건,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가 더 많건, 어쨌든 사장이 임명되고 이사장이 들어오고 이사회가 꾸려지고, 이런 제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억압 기제들은, 당연히 KBS의 보도에 영향을 준다. 이를 어떻게 할까? 기자들에게, PD들에게, 맞서라고 주문만 하면 되나?

5. 너무 패배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인 얘기만 한 거 같다 나도 참 싫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 그 속에 있는 KBS를 바라보는 내 시각은 이렇다. 나름 KBS를 겪어봤고, 속성을 알기에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게 됐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 dh

<토론문>

장성택, 현영철 그리고 박승원
박근혜 정부와 3단계 북한 불안정론

김치관(통일뉴스 편집국장)

보수정권의 집권이 두 차례 이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보도 양상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장성택 처형'이라는 엄청난 '국정원 특종'을 바닥에 깔고 시작해서 '현영철 처형'을 거쳐 '고위급 탈북'으로 이어지는 3단계 과정을 거쳐 '북한 불안정론'을 상수화 했다. 또한 이같은 북한 불안정론을 만들고 퍼트리는 3단계 과정에서 정보기관과 권력기관, 그리고 언론기관이 각각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특별한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

1. 국정원의 세계적 특종, 장성택 처형

2013년 12월 3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을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국정원(원장 남재준)은 대통령선거 댓글공작과 화교 탈북자 출신 서울시공무원의 간첩조작사건으로 절체절명의 궁지에 내몰린 상황이었다. 어쨌든 이후 장성택 숙청과 처형이 북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국정원은 세계적 특종으로 상종가를 구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대선 댓글공작과 간첩조작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했고, 탈출구를 '장성택 처형'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불안정론'에서 찾았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그해 12월 21일 국정원 간부 송년회 자리에서 "2015년에는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며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고 말했다. 이같은 기류에 따라 외교부조차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불안정성, 불확실성, 유동성'을 의심할 바 없는 전제로 깔았다.

이처럼 국정원발 '북한 불안정론'은 박근혜 정부 전체에 잘 먹혀들었고, 국정원도 위기 탈출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심지어 외국 정보기관들도 국정원의 '북한 불안정론'에 고개를 끄덕이는 상황까지 갔다. 나아가 '북한 불안정론'을 기저에 깔고 2014년 연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외쳤고, <조선일보>는 '통일은 미래다' 시리

즈를 요란하게 내놓기도 했다.

2. 현영철 숙청과 대통령의 지시

그러나 기다리던 김정은 정권의 동요 기미는 포착되지 않고, '통일대박'은 아무런 결실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게 됐다. 더구나 5.24조치 등으로 한국인들의 발이 묶인 사이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이 방문한 평양은 동요는커녕 오히려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만 확인됐다. 평양 시내에 늘어난 고층 건물과 차량, 핸드폰 300만대 보급 소식 등이 그것이다.

'북한 불안정론'에다 '통일대박론'까지 가세했지만 약발이 떨어지자 상황은 서서히 반전되기 시작됐다.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취한 5.24조치로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인들을 필두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심지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일각과 대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까지 나서서 남북경제교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더 이상 '북한 불안정론'에 근거한 대북 압박정책이 통하지 않게 된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5월 13일 국정원은 느닷없이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 정보와 고사포 총살 첩보를 국회에 보고하고 이례적으로 상세한 보도자료를 돌렸다.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보 가치가 판명되지도 않은 '반역죄 처형'과 '고사포 총살'이라는 '첩보'까지 대외에 상세히 브리핑한 희귀한 언론 플레이였다. 물론 보수언론들은 국정원이 제공한 첩보까지 기정사실화 해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정원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북한 불안정론'도 되살아났다.

그런데 현영철 숙청 정보와 처형 첩보가 이처럼 상식을 벗어나 상세히 제공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노컷뉴스>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를 인용 "국정원이 현영철 숙청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건 빨리 알려서 북한 실상을 국민들이 실감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시를 하면서 긴급하게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연히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빛샐 틈'조차 없다던 한미동맹이 무색하게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과의 동맹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했는가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를 비켜가며 별볼일 없는 해외순방에 나섰다가 구설수에 오른 시점이었다. 더구나 여권은 '성완종 리스트'로 휘청거리고 있었다. 당연히 외교 난맥상과 '성완종 리스트' 등으로 위기에 몰린 청와대가 북한 카드를 활용했다는 비판적 분석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은 4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에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국정원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다. 국정원으로서도 현영철 숙청 정보를 회심의 반전 카드로 꺼내들고 싶었을 것이다.

어쨌든 장성택 처형 정보의 발신과 전파, '북한 불안정론'으로의 확대 재생산이 국정원의 작품이었다면 현영철 숙청 정보의 전파와 정치적 활용은 청와대의 의중이 개입됐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물론 현영철 숙청 정보는 반역죄 처형, 고사포 총살 첩보와 버무려져 <"사람에게 고사총을"...北 김정은 공포정치 심화>(연합 5.13)와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정원도 이날 북한의 간부들 사이에서 김 제1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는 친절한 분석까지 덧붙여서.

3. 보수언론과 고위급 탈북자

현영철 처형 첩보가 기정사실처럼 확산된 뒤 또다른 수상한 보도들이 줄을 이었다. 먼저 <채널A>가 7월 3일 단독보도를 통해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북측 차석대표로 참석했던 고위 장성이 탈북해 한국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박승원 인민군 상장(남측 중장)이라고 전했고, 이튿날 <동아일보> 등은 이를 기정사실화 해 보도했다.

이에 뒤질세라 <YTN>은 7월 6일 "지난 주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간부 3명이 국내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YTN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의 군수경제 전반을 관할하는 제2경제위원회 고위급 인사 등이 국내로 망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같은날 탈북한 노동당 고위간부를 인용, "지난해 4월말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던 최룡해가 체포돼 한 달 넘게 감금돼 있었던 적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확인되지 않은 북한 고위급 인사 탈북설 등이 난무하자 통일부 대변인은 7월 6일 이를 사실상 부인했고, 정보당국도 신빙성이 낮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다. 특히 마식령스키장 건설 책임자로 알려진 박승원 상장의 망명 보도는 종편 보도를 계열사 주요 보수일간지가 확대재생산한 케이스로 주목된다. 이후에도 근거없는 종편 보도를 계열사 보수일간지들이 받아 보도할 경우 종편의 폐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동아일보>와 <YTN>의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 보도 경쟁은 이제 정보기관이나 청와대 등 정치권발 '북한 불안정론' 유포를 넘어 언론이 '북한 불안정론'을

유포하는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북한 불안정론' 유포의 주체가 이제는 국정원과 청와대를 거쳐 보수언론까지 가세한 형국이고,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 사회의 보수화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정보기관과 권력기관, 언론기관까지 가세한 '북한 불안정론'이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고, 북한 불안정론은 특정 세력의 일시적 필요에 의한 '유행'이 아닌 '상수'로 굳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성택 처형이라는 충격적 사건이 현영철 고사총 처형으로 이어지고 '당 부부장 이상, 군 장성급 이상'을 의미하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설로 이어지면서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북한은 불안정한 국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공포정치의 대명사로 각인되고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교류협력을 촉진하자던 방향은 어느덧 표류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를 불안정한 김정은 정권, 북한 체제에 대비한 '통일대박'을 준비하자는 논의가 횡행하고 있다. 그나마도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재도약을 위한 구상을 발표에는 '통일대박'마저 빠져있다. 북한의 특별한 동요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남북대화 마저 끊긴 상황에서 괜히 통일대박만 거론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보기관과 권력기관, 그리고 언론기관이 현실을 외면하고 확대재생산한 '북한 불안정론'의 폐해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불안정한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올바른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 다운 남북관계가 실종된 근저에 이같은 '북한 불안정론'의 3단계 발전과정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토론자의 판단이며, 특히 언론이 여기에 발맞추거나 심지어 주도하고 나선 것은 우리 언론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문>

심영섭(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토론문>

보도영역의 다양화와 적극적 접촉 필요
2015년 현재 대북 보도의 문제점과 지향점

장용훈(연합뉴스 북한전문 기자)

1. 무엇이 문제인가

1) 북한은 어떻게 볼 것인가.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과 2011년 사망,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후계체제 구축 등을 거치며 '북한 붕괴론'이 대북 관점의 핵심 담론으로 정착.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보도 프레임은 권력의 불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찾기에만 집중.

-북한을 공존해야할 존재로 보기 보다는 곧 붕괴할 국가로 인식함에 따라 남북한 화해와 협력 등에 대한 관점은 사실상 실종.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다양한 변화와 경제적 성장 등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음.

2) 정치 중심의 편향

-'북한 붕괴론'은 자연스럽게 북한 정치권력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관심으로만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북한 보도는 정치 중심.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 권력 핵심부의 변화에만 관심.

-북한이라는 사회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들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정치 중심 보도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3) 취재원의 핵심이 되어버린 탈북자

-종편의 등장과 더불어 북한 보도에서 탈북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지방에서 살다가 온 일반 주민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통해 북한의 권력 변화 등 핵심사안을 평가하고 취재하는 방식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큼.

-탈북자의 언론 등장이 빈번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더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어내고 있음.

4) 자성의 부재

-1990년대 중반에도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김일성의 사망을 거치면서 북한 붕괴론이 확산됐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언론계에는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확산.

-1995년 언론노조, 기자협회, PD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제작보도준칙'을 제정하기도 했음.

-현재 국내 언론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성은 실종된 상황.

2.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1) 북한보도의 다양성 확보

-북한의 권력변화를 붕괴론으로 연결하는 20년 전 한국 언론이 범한 오류로부터 빠져나와야 함.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정치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2) 취재원의 확장

-현재 대부분의 북한 보도는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탈북자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음.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방북 보도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북한과도 적극적인 접촉을 할 필요.

<토론문>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부록 1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부록 2	2006년 남북언론인 금강산 토론회 공동성명
부록 3	2007년 평양 남북언론인 상봉모임 합의서
부록 4	2008년 5월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 공동결의문
부록 5	2008년 10월 기사교류 합의서
부록 6	남북공동선언(6.15선언)
부록 7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10.4선언)

<보도제작준칙, 공동결의문, 합의서 등>

1. 보도제작 준칙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전 문>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보도·제작에서 화해와 신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다. 이같은 반성 위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및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아 우리 언론이 통일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으로 공동의 보도·제작 규범을 제시한다.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정신에 따라 먼저 남과 북의 평화공존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힘쓰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단결하여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총강

1. 우리는 대한민국(약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조선)으로 나누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우리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보도·제작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3. 우리는 남북관계 보도·제작에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타파한다.

4. 우리는 남과 북의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다.

5. 우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보도실천요강>

1. 남북 긴장해소 노력 : 남북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군비증강 등 제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남북간 긴장 및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2. 인물 호칭·직책 존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물에 대한 호칭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명 다음에 직책을 붙여 호칭한다.

3. 관급자료 보도 유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관급 보도자료의 무절제한 인용·전재를 피하고 최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보도한다.

4. 내외통신 인용 책임 : 내외통신 자료는 관급 보도자료 가운데 하나이므로 내외통신 자료를 전적으로 인용한 보도라 할지라도 그 책임은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5. 외신보도 신중 인용 : 외신을 활용한 특정세력의 목적성 여론조성을 경계하며, 제3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외신보도는 인용하지 않는다.

6. 1차자료 적극 활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문·방송·통신 보도와 잡지 등 1차자료에서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적극 활용한다.

7. 각종 추측보도 지양 : 국내외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각종 설은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취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사진·화면 사용 절제 : 해당기사와 무관한 자극적인 화면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으며, 냉전과 대결의 시각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노력한다.

9. 희화적인 소재 지양 : 남북간 언어, 문화, 생활의 차이와 상호 이질감을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보도에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는다.

10. 망명자의 증언 취사 : 망명자의 증언은 그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사화하도록 한다. 전언이나 추정 등을 기사화해야 할 경우는 '전언', '추정' 등을 명기한다.

<제작실천요강>

1. 정보제공 적극 편성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프로그램 편성시 형식적·소극적 편성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드라마·오락물 등 각 장르별로 적극 편성하며, 남북 관련 긴급 혹은 특집프로그램 편성시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특히 유의한다.

2. 통일지향 가치 추구 : 기획, 출연자 선정, 편집 등의 제작과정에서 민족동질성 회복, 화해·공존공영의 증진, 통일의 촉진이 구현되도록 적극성을 갖고 제작에 임한다. 프로그램 제작시 여러 가치가 충돌할 경우 인간 존엄성 존중, 민족이익 수호, 민족화해 증진 등의 가치를 판단의 우선가치로 삼는다.

3. 냉전시대 관행 탈피 : 냉전시대에 형성된 내면적 자기검열, 습관화된 분단의식, 누적된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 냉전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요·가곡·드라마·영화 등의 방송을 피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상업·선정주의 경계 :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경계하며, 안일하고 편의적인 제작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아가 현재의 모든 방송행위가 미래의 통일민족문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 제작에 임한다.

5. 다원주의 가치반영 : 사회적 가치나 의견 등의 메시지를 시청취자에게 전달할 때는 제작진이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청취자가 듣고 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한 가감없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6. 보도활용 제작 신중 : 국내외 매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십·꽁트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보도의 정확성, 취재원의 신뢰도, 보도 이면에 게재되어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의도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방송하며, 무분별하게 인용하여 민족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화하지 않는다.

7. 생활문화 적극 소개 :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는 남북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이 진정한 최종적 통일임을 인식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프로그램 소재로 적극 채택한다.

8. 능동적인 자료 접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시 정보의 편중성·부족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작진 스스로 노력한다. 1차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각 분야 연구자 등 폭넓은 인적자원 확보에 각자가 능동적으로 힘쓴다.

9. 남북차이 이해 노력 : 언어·문화·생활·관습·가치관 등에서의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한 이 차이들을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도록 한다.

10. 남북 동질성의 부각 : 남북의 차이점보다는 같은 점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부각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통일지향적 방향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힘쓴다.

1995. 8. 15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한국기자협회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2. 2006년 남북언론인 금강산 토론회 공동성명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선도자가 되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 성원들은 2006년 11월 29일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실천과 남북언론인들의 역할'을 주제로 남북언론인토론회를 개최했다.

남북언론인토론회는 분단된 지 61년 만에 남과 북의 언론인들이 대규모로 한 자리에 모여 흉금을 터놓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6.15 공동선언 실천과 이 땅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언론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한 지혜를 모은 뜻 깊은 모임이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 나가기로 한 민족자주선언이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민족대단결 선언, 평화통일선언이다.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합의하고 온 겨레가 지지하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6.15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해 뚜렷이 확증되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이 밝힌 통일이정표를 따라 전진하는 겨레의 앞길에는 시련과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6.15 공동선언을 반대하는 내외반통일세력에 의해 대결과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남과 북의 언론인들은 6.15 시대 대변자로서의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남과 북의 언론인들은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데 적극 앞장선다.

둘째, 남과 북의 언론인들은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전쟁위협을 단호히 반대 배격한다.

셋째, 남과 북 언론인들은 6.15 공동선언 실천을 후퇴시키고 동족 사이에 대결과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민족분열적인 보도를 배격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공정하게 보도한다.

넷째,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활동에서 연대협력을 계속 해나간다.

언론은 정의이고 양심이며 진실이어야 한다.

남과 북의 언론인들은 겨레의 목소리를 온 세계에 알리는 전파자가 되고 민족자주와 통일을 앞당기는 시대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6.15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뜻과 마음을 합쳐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언론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자는 것을 해내외 모든 언론인들에게 호소한다.

2006년 11월 29일
금강산

3. 2007년 평양 남북언론인 상봉모임 합의서

합 의 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남측언론본부)와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이하 북측언론분과)는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언론활동을 다음과 같이 벌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첫째 : 남측언론본부와 북측언론분과는 2007 남북정상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민족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 나라의 통일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 지침이며 실천강령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10.4 선언지지운동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둘째: 남측언론본부와 북측언론분과는 민족을 중시하고 동족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언론활동을 벌여 나가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고 반대하는데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였다.

셋째 : 남측언론본부와 북측언론분과는 6월 15일을 민족 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전민족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대 활동들을 다양하게 벌려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 남측언론본부와 북측언론분과는 동족을 적대시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며 민족내에 대결과 불신을 조장하는 그 어떤 사소한 왜곡중상보도, 편파보도, 모략보도에 대해서도 묵인하지 않고 언론공조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섯째 : 남측언론본부와 북측언론분과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6.15 시대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며 민족의 단합과 평화번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연대활동과 협력사업들을 적극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대표	언론분과위원회 위원장
정일용	최칠남

2007년 11월 27일

평 양

4. 2008년 5월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 공동결의문

남북(북남) 언론인대표자회의 공동결의문

우리는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6.15시대의 선도자들이다.
남북(북남)관계가 악화되고 겨레의 6.15 통일대진군이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언론인들이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깊이 자각하고 6.15시대를 계속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의 선봉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언론의 무궁무진한 힘을 활화산처럼 폭발시켜 반민족적 · 반통일적 도전을 분쇄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를 기치로 삼고 통일언론활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겠다.
<우리 민족끼리>는 온 겨레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자주통일운동의 척도이며 생명선이다.
우리는 한편의 기사를 쓰고 하나의 영상물을 편집해도 민족우선, 민족제일의 정신이 맥박치게 하여 우리 겨레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자주와 존엄 민족중시의 열풍이 계속 타오르게 하겠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안아온 민족사적 사변들을 널리 알리고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언론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우리는 정의의 붓대, 애국의 필봉으로 외세의 편에 서서 동족을 모해하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해치려는 온갖 행위를 단호히 저지시켜나가겠다.

2. 우리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 위협을 단호히 반대하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앞장서 나가겠다.
민족적 화합과 평화는 겨레의 일치한 염원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민족대결론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폭로하는 언론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
특히 일부 세력의 민족대결책동을 비호하고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편파보도, 모략보도, 왜곡중상책동을 철저히 배격해나가겠다.
우리는 내외호전세력에 의해 이 땅에 또다시 민족적 참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전쟁위협도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

3.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 언론인들과 각 계층과의 연대단합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

하나의 붓대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없으나 그것이 합쳐지면 반전평화의 성벽이 되고 겨레의 마음이 이어지며 통일의 길도 열린다.

우리는 통일언론대열을 끊임없이 늘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위한 길에서 언제나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다.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6.15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는 6.15시대를 지켜선 통일언론조직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기사교류와 연대활동을 통해 6.15통일시대를 앞장에서 선도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6.15시대의 산아인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고수하고 확대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

특히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하여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위한 언론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벌여 나가겠다.

해내외 언론인들이여!

언론이 일어서면 온 겨레가 따라서고 시대가 전진한다.

우리 모두 <우리 민족끼리>의 필봉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6.15통일시대를 고수하고 계속 전진시켜 나가자!

우리 언론인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과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민족의 자주와 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

2008년 5월 8일

금강산

5. 2008년 10월 기사교류 합의서

합 의 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남측언론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이하 북측언론분과)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행을 위한 언론활동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적극 도모하려는 입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남측 언론본부와 북측 언론분과는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인터네트 《통일언론》과 북측의 인터네트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기사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2. 남측 언론본부와 북측 언론분과는 쌍방사이에 개설된 전자우편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보도기사, 론평, 사진기사, 영상기사 등 다양한 형식의 기사들을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언론단체들에서 보도하도록 한다.

3. 남측 언론본부와 북측 언론분과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언론인들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며 남북공동선언을 훼손시키거나 그 이행에 장애물을 조성하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 활동하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 김 경 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 위원장 최 칠 남

2008년 10월 20일
평 양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김 대 중	김 정 일

김 대 중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10.4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